

# 한진家, 총수자리 놓고 내부갈등?... 키는 이명희 손에

〈故 조 회장 아내·前 일우재단 이사장〉

대기업집단과 동일인 관련서류 내일까지 공정위에 제출해야  
조현아·조현민 갑질횡포 논란 등 상황 감안 '조원태 회장론' 우세



대한항공 서소문 사옥.

한진그룹이 새로운 그룹 총수 자리를 놓고 내부 갈등을 빚고 있다. 한진그룹은 현재 정부가 제시한 대기업집단과 동일인(총수)지정 데드라인(15일)을 목전에 두고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한진가 내부에 아직 풀지 못한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만약 한진그룹이 대기업집단과 동일인(총수)지정 관련 서류의 데드라인을 넘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강제로 지정할 수 있어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오는

15일까지 공정위에 올해 대기업집단과 동일인(총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5일 당일 공정위가 관련 발표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한진그룹은 14일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가 서류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당일 제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정위는 애초 5월 1일 대기업집단과 동일인을 발표하려 했지만 한진그룹 문제로 두 차례 미뤘다. 재계는 현 상황을 두고 형제간 갈등을 빚고 있는 게 아니

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전 회장이 갑작스레 별세 하면서 후계구도를 만들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진그룹은 지주회사인 한진칼만 지배하면 대한항공 등 나머지 주요 계열사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 한진가(家)의 한진칼 지분이 28.8%에 달하지만, 이 중 17.84%는 조 전 회장 지분이다. 장남 조원태 회장의 지분은 2.34%밖에 되지 않아 다른 자녀

인 현아(2.31%)·현민(2.30%) 씨 등과 큰 차이가 없다. 이 가운데 조원태 회장을 새로운 총수 후보로 세우려면 가족들이 선친이 남긴 한진칼 지분을 상속받아 장남을 위한 우호지분으로 남겨둘지 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조현아·현민 씨가 일부 사업에 대한 경영권 등 대가를 요구하면서 합의가 잘 안 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막대한 상속세를 어떻게 부담할지도 가족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번 논란을 정리하는 키는 고 조 회장의 아내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쥐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고 조 회장이 지분 상속에 대한 유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전 이사장이 가장 많은 지분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경영권을 위협하는 강성부펀드(KCGI) 견제를 의식하고 있어 '남매의 난'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경우 한진그룹은 조원태 회장의 품으로 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미 조원태 회장이 한진칼 회장으로 올라와 있는 만큼, 다른 이가 대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조현아·조현민 자매는 갑질 횡포 논란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상태이기 때문이다. KCGI의 견제가 있지만 항공업계 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그룹을 이끌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다. 재계 관계자는 "KCGI 등의 견제를 막기 위해 힘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현재 상황에서 조 회장으로 오너 일가가 합의를 이루겠지만 총수가 결정되더라도 상속 이슈는 단기간에 정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 조 전 회장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34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된다. 상속세율 50%를 적용하면 유족들은 약 1700억원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 /양성문 기자 ysw@metroseoul.co.kr

## 버스노조 "홍남기, 정부역할 검토 언급"

버스파업 D-1

정부-노동조합 비공개 회동  
정부가 최근 버스노동조합의 총파업과 관련해 중앙정부의 역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버스 요금 인상 가능성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총파업을 추진 중인 버스 노동조합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홍 부총리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 류근중 위원장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을 만나 버스업계 주 52시간 근로 적용에 따른 인력 총원과 임금 인상 등 노조의 요구 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버스 노동조합 측은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부총리가 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류 위원장은 "부총리가 시내버스 인허가 주무 부처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3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류근중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만나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됐기 때문에 역할은 지방정부가 하는 게 맞다고 했다"며 "그러나 중앙정부도 앞으로 시내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지원금 규모에 대해선 "노정 간 지원금을 달라고 요구하러 온 자리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류 위원장은 이어 "부총리가 이 사안과는 관계없이 시내버스 요금을 조정할 때가 됐다고 했다"고 전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 이재갑 "내년 최저임금, 현행법 따를 것"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부, 결정체계 개편방안 발표

"4월 임시국회서 입법 못 이뤄 새 공익위원 이달 말까지 위촉"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존 결정 체계에 따라 심의한다는 점을 공식 발표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됨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현행법을 따르기로 한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5월 7일 종료된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입법이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현행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최저임금 결정체계 입법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나 법 개정 지연, 공익위원 사퇴 등으로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이를 신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지난 2월 최저임금 심의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현행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심의에 전문가 개입을 확대한 것으로, 노사 교섭 방식의 기존 결정 체계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당초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부터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국회에서 법 개정이

지연돼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렇자 노동부는 지난 3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고 기존 결정체계에 따른 심의는 이미 시작된 상태. 정부 예산의 상당 부분이 최저임금과 연계돼 있어 예산안 편성 시한이 오는 8월 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회에서 당장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더라도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다. 류장수 위원장을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8명이 최근 공식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노동부는 새 공익위원 위촉에 착수했다. 이 장관은 "2020년 최저임금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새로운 공익위원 위촉 절차를 5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 공정성을 높이고 투명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과거와 같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과정들이 공개되지 않고 최종 결과만 발표되는 방식으로는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제58차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경매교육**  
~~400,000원~~ → **60,000원 (85% 할인)**  
● (평일반) 2019년 5월 15일~6월 5일  
매주 수, 목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 총8강  
4주차는 6월 4일(화) 6월 5일(수)  
● (주말반) 2019년 5월 18일~6월 8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30분 / 총8강  
● 현장교육 (별도음션) : 300,000 → 130,000원  
5월26일(일), 6월 2일(일), 6월 4일(화)  
www.leadersauction.com  
교육문의 02) 521-9111 (강남역 5번출구)

## 사전계획안-자율구조조정지원 연계 활성화

>> 1면 '법정관리 기업...'서 계속

신용도 급락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기업회생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신규자금지원(DIP 금융)을 투입해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DIP 금융은 회생절차 기업에 운영자금 등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을 말한다. 이 정책관은 "올해 중 시범사업으로 3~4기업을 우선 선정해 20억원을 지원하고, 법이 개정되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D

IP기금을 마련해 300억~500억원의 운전자금 등 DIP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구조조정제도인 사전계획안(P-Plan)제도와 자율구조조정지원(ARS)제도 간 연계도 활성화한다. 사전계획안 제도는 법원 주도의 법정관리와 채권단 중심의 워크아웃 장점을 합친 기업 구조조정 방식이다. 자율구조조정지원 제도는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미루고 이전처럼 영업하면서 채권

자들과 구조조정 문제를 협의한 후 절차를 진행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처음으로 광학렌즈 제조업체인 동인광학에 자율구조조정 진행 과정에서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사전회생계획제도' 절차를 밟게 한 바 있다. 이 경우 채권자 협의사항이 포함돼 기존 회생절차보다 신속하게 기업 회생이 이뤄진다는 장점이 있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회생절차 진행중 인수합병(M&A)가 활성화되도록 보증기관 및 채권은행의 협조도 강화할 방침이다. /내유리 기자 yul115@